

공화주의 이론의 명암(明暗)

Light and Shade of the Republican Theory

고 봉 진*
Ko, Bong-Jin

목 차

- I. 공화주의의 핵심 주장
- II. 공화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가?
- III. 정치, 시스템, 시민의 콜라보

국문초록

필자는 이 논문에서 공화주의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비지배'로서의 자유, 시민의 형성적 정치. 공화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 자유' 개념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자유에 필요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무기력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자유' 개념이 '법의 지배'와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공화주의의 주장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형성적 정치가 한 묶음처럼 연결된다는 점에 매력이 있다.

필자는 공화주의 이론 구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공화주의 이론이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이론인지를 살펴보았다. 공동체를 지향했던 이전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복잡해지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가 되었다. 공화주

논문접수일 : 2018.01.23.

심사완료일 : 2018.02.21.

게재확정일 : 2018.02.21.

* 법학박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자들은 공화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달라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공화주의 이론 자체는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시민의 자치, 형성적 정치의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필자는 '시민'에 향한 공화주의의 눈길을 '공공 시스템과 정치'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사회의 공공 시스템이 시민의 참여 없이 형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는 시민보다는 제도권 정치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정치'는 '기술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성적 정치'를 말한다. '국민의 집' 구상을 현실에서 이루어낸 스웨덴의 정치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한 독일의 정치를 교사로 삼을 수 있다.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법을 통한 공공선 확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권 정치의 힘에 의해 '공공 시스템'이 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시민의 힘도 필요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시민의 힘'은 공화주의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중이 작으며, 필자가 상정하는 '시민의 개념'도 공화주의와 다르다. 필자는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보다는, 각자의 분야와 위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을 상정한다.

주제어 : 공화주의, 시민, 공공성, 비지배, 정치, 시스템

공화주의는 원래 군주제에 대항하는 정치이론이었으나, 현대 공화주의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의 폐해, 신자유주의의 적폐에 맞서는 이론으로 보인다.¹⁾ 공화주의 이론이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규모에 비추어 실현 불가능한 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그 주장하는 바는 경청할 만하다. 공화주의 이론에서 어떤 점은 받아들이고 어떤 점은 버릴 것인가? 필자는 이 논문에서 공화주의 이론의 명암(明暗)을 살펴려 한다.

1) 김경희, 「공화주의」, 책세상(Vita Activa 개념사 15), 2009/2014, 13면.

1. 공화주의의 핵심 주장

필자는 이하에서 공화주의의 핵심 주장을 다음 3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비지배’로서의 자유, 형성적 정치. 공화주의 자유 개념인 ‘비지배로서의 자유’에 연유해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형성적 정치’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공화주의에는 여러 모델이 있다. 공화주의 모델 차이는 공화주의 이론 차이로 이어지는데, 필자의 논의는 그런 것을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1.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공화주의는 ‘사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를 언급한다.²⁾ ‘레스 푸블리카’는 사적 지배(domination)가 최대한 배제된 공적 공간을 뜻하는데, 어느 개인에게도 속하지 않은 공공 사물(公共事物), 공공 재산을 말한다.³⁾ (나중에 설명하게 될) ‘비지배’로서의 자유 개념도 이 때문이며, 법을 통해 사적 지배를 배제하고 공적 지배를 강화한다.

공화주의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데, 이는 법을 통해 공적 사물, 공공 재산, 공적 공간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공화국’은 공공선을 담고 있는 법에 의해 공적 사물, 공공 재산, 공적 공간이 지켜지는 국가이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정부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법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공공선이 우위에 서고, 공공의 것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⁴⁾

공공선을 규율한 법 아래에서 시민들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나눈다. 공공선을 담고 있는 법 앞에서 시민들은 평등한데, 이 때 평등은 자유주의적 평등을 넘어 사회경제적 평등까지도 포함한다.⁵⁾ 공화주의자들은 법 이전에 자유는 존

2) 네이버 두산백과 ‘레스푸블리카(Respublica)’

3)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공화주의」, 역자 서문, 인간사랑, 2006, 8면.

4)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개서(주3), 16면에서 재인용함.

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을 통한 자유’를 추구한다. 법은 사적 지배를 배제하고 공공선을 증진시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처럼 공화주의자들은 진정한 자유는 사적 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표한다.⁶⁾

2. ‘비지배’로서의 자유

공화주의는 타인의 자의로부터의 자유인 ‘비지배(non-domination)’로서의 자유를 추구한다.⁷⁾ 공화주의자들은 ‘간섭의 부재’로서의 자유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종적 지배(예속)의 부재’를 원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사적 형태의 주종적 지배(예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예속이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다.⁸⁾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인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훨씬 뛰어넘는다. 주종적 지배 또는 예속이 없는 상태는 간섭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⁹⁾

공화주의는 실제적인 간섭이 없는 경우라도 타인의 위협적인 권력에 지배된다면 부자유하다고 본다.¹⁰⁾ 타인의 간섭이 없어도 타인의 예속적 지배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다. “시민들이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독재자나 과두지배계급에 의해 핍박받는 경우, 여성이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면서도 전혀 저항할 수 없거나 사후적으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고용주나 감독자의 크고 작은 횡포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경우, 퇴직자가 자신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연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변덕에 좌우되는 경우,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 것이 의사의 호의에 달린 경우, 젊은 학자들의 직업적 미래가 연구성과의 질이 아니라 선배 학자의 변덕에 좌우

5)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이며 사회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이를 넘어선 사회민주주의적인 것이라면서 양자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화주의는 양자를 같은 것으로 본다.”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계서(주3), 역자 서문, 11면.

6)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계서(주3), 역자 서문, 11면.

7) 광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 한길사, 2010/2011, 29면.

8)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계서(주3), 91면, 96면.

9)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계서(주3), 104면.

10) Philip Pettit(광준혁 역), 「신공화주의」, 한국어판 머리말, 나남, 2012, 6면.

되는 경우, 시민의 검사의 자의적인 말 한마디에 의해 언제라도 감옥에 수감될 수 있는 경우 등, 이 모든 경우에서 간섭은 보이지 않는다.”¹¹⁾

반면에 타인의 간섭이 있어도 타인의 연속적 지배가 없는 경우가 있다.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가 대표적인 예다.¹²⁾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누진세로서의 세금이 ‘간섭’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만,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공화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공화주의자들은 법에 의해 개인적 선택에 부과되는 제한이나 간섭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화주의 자유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¹³⁾

공화주의자들에게 공화정은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가장 적합한 통치방식이다. 법의 지배를 통해 사적 지배가 배제되면서 시민의 자유가 수호되기 때문이다.¹⁴⁾ 키케로(Cicero, B.C. 106-B.C. 43)의 ‘클루엔티오를 위한 변론’의 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 모두는 자유롭기 위해 법에 복종한다.”¹⁵⁾ 공화주의자들이 보기에, 사적 연속과 법적 구속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공화주의자들에 따르면, 연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을 늘려야 한다.¹⁶⁾ 자유주의들은 법이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한다고 보는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법이야말로 자유를 보장한다고 본다.¹⁷⁾

11)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계서(주3), 92-93면.

12) “두 가지 예만 들자면, 시민들에게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라고 강제하는 법률, 또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시민들을 종신형에 처하는 법률은 분명히 제한이자 규제이며, 또한 간섭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에 의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자의에 연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계서(주3), 95-96면.

13)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계서(주3), 108면.

14)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계서(주3), 113면.

15)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계서(주3), 110면에서 재인용함.

16)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계서(주3), 119면.

17)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계서(주3), 132-133면;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자유의 반대는 간섭이 아니라 지배이다.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법의 간섭은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선이다. 18세기 공화주의 법학자인 블랙스톤(Blackston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중하게 고안될 때 결코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를 창출한다. 왜냐하면 법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기 때문이다.” Philip Pettit(곽준혁 역), 전계서(주10), 105, 107면.

3. 시민의 형성적 정치

공화주의는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들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비지배로서의 자유’, ‘법을 통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를 실현할 방법으로 시민적 덕성(civic virtue)과 자치(self-governance)를 내세웠다. 그들은 시민들의 자치 능력을 배양시키고 ‘좋은’을 만들어나가는 형성적 정치(formative politics)을 추구한다. 형성적 정치는 시민들 속에 자치에 필요한 인격적 성질을 함양시키는 정치를 말한다.¹⁸⁾ 공화주의자들은 시민의 자유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 ‘법을 통한 자유’는 역동적인 형성적 정치를 필요로 했다.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가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시민의 높은 덕성이 요구되었다.

공화주의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자유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개인의 선택 자유에 기반을 둔다.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개인에게 일정 가치를 강요할 수 없다. 국가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는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공화주의자들이 보기에, 이 때문에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시민의 자치를 고양할 수 없고, 시민이 공공 생활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다. 이 점이 공화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핵심이다. 동시에 공화주의는 자유주의 자유관(自由觀)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인 ‘자유’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적 자유관은 그 나름의 호소력은 있으나 자치를 뒷받침하는 시민적 자원이 결여되어 있다. 자유주의적 자유관이 우리의 공공생활을 힘들게 하는 무력감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결함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공철학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유를 보장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공공철학은 자유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적 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¹⁹⁾

공화주의 자유 개념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시민적 덕성의 형성을 통해,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추구된다. 형성적 정치의 역동성이 없이는 자유는 불

18) Michael J. Sandel(안규남 역), 「민주주의의 불만」, 동녘, 2012, 18면.

19) Michael J. Sandel(안규남 역), 전계서(주18), 19면.

가능하다. 형성적 정치를 통해 사회의 법에다 공공선을 심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을 길러야 하고, 이들 시민은 공적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루소는 자유와 형성적 정치의 연관성을 간략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자유 없이 애국은 불가능하며, 비르투 없이 자유는 불가능하며, 시민들 없이 비르투는 불가능하다.”²⁰⁾

II. 공화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가?

필자는 앞에서 공화주의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비지배’로서의 자유, 시민의 형성적 정치. 공화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 자유’ 개념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자유에 필요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무기력하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자유’ 개념이 ‘법의 지배’와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낸다고 본다. 공화주의의 주장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형성적 정치가 한 묶음처럼 연결된다는 점에 매력이 있다.

하지만 이하에서는 공화주의 이론 구성을 우선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생각이다. 공화주의 이론이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이론인지 살펴볼 생각이다. 공동체를 지향했던 이전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복잡해지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가 되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달라진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공화주의 이론 자체는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시민의 자치, 형성적 정치의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1. 현대 사회에 ‘시민의 형성적 정치’는 가능한가?

필자가 보기에, 공화주의의 주장은 다음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된다. 시민의

20)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게서(주3), 169면에서 재인용함.

형성적 정치 →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 비지배로서의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법의 지배’가 필요하고, ‘형성적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공화주의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형성적 정치’가 있다는 점이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을 기르고, 시민의 자치가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바로 ‘시민적 덕성’, ‘자치’, ‘형성적 정치’에 대한 것들이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규모를 생각할 때, 공화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시민적 덕성’, ‘시민의 자치’가 가능할지 필자는 의문이다.²¹⁾ 이전 사회와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달라져 이전에는 타당했지만 오늘날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적지 않다. 필자는 ‘시민적 덕성’, ‘자치’, ‘형성적 정치’를 주장하는 공화주의 이론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주장하는 바는 옳고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옳고 타당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 적용 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는 고대인의 자유관과 현대인의 자유관이 매우 다르다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현대 사회는 점점 이질적으로 분화되어 갔다.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체는 무너지고, 이질성에 기초해서 부분 사회로 분화되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 통일시킬 수 없다. 공동체로 파악할 수 있는 작은 범주의 사회에서는 공감능력이 나뉠 잘 발휘된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능력이 발휘된다. 사람 수가 많아지고 공동체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사회에서 인간의 공감능력은 더욱 제한된다. 공동체에서 이익사회로 변한 사회에서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닌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된다. 개인 양심이 여전히 큰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이전 공동체 사회만 못하다. 사회는 여러 부분 사회로 다시 나뉘며, 그 안에서 인간의 공감능력은 부분적으로만 발휘된다. 자신이 속한 사회 이외의 사회에 자신의 공감능력을 확대하는 ‘이타적’ 인간은 그리 많지 않다.

현대 사회는 ‘도덕과 윤리의 상실’을 경험하고 ‘시민의 상실’을 경험했다. 루

21) “시민적 자유 노선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반드시 두 가지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반론은 공화주의적 이상의 부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두 번째 반론은 공화주의적 이상의 부활이 바람직한가를 문제 삼는다. 첫 번째 반론은 현대 세계의 규모와 복잡성을 생각할 때 공화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식의 자치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Michael J. Sandel (안규남 역), 전개서(주18), 421면.

소 스스로도 근대사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대 정치인들은 끊임 없이 도덕과 덕을 둘러싸고 고심하고 대화했으나,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은 상업과 돈을 두고만 지껄인다.”²²⁾ “우리에게는 물리학자와 기하학자, 화학자, 시인과 음악가, 화가 등이 있으나, 더는 시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²³⁾ 한국 사회도 점점 개인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전 공동체 문화와 달리, 오늘날 개인화된 문화 속에서 ‘나홀로 밥’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다. ‘관계’와 ‘권태기’를 합성한 신조어인 ‘관태기’란 용어도 최근 등장했다.²⁴⁾ 물론 개인주의 성향이 한국의 그릇된 공동체 문화를 고쳐주는 면도 분명 있다.²⁵⁾ 필자는 공동체만이 시민의 덕성을 키울 수 있고 개인주의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형성적 정치를 위한 시민의 양성이 공동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 하에서 힘들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개인주의 하에서 잘 형성된 시민이라 하더라도 형성적 정치로 나아가기는 꽤나 힘들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시민적 품성은 호혜적 사회관계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²⁶⁾ 개인화된 개인들로 인해 공공 영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²⁷⁾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할 매체가 현대 사회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비지배로서의 자유’ 개념은 시민적 덕성, 시민 자치, 형성적 정치와 연결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것만큼 현대 사회에서는 강하지 않다.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넘어 심지어 위협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다.

“하지만 요즘의 정치사상가들 사이에서는 공화주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적 덕성이라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것이거나 위협스러운 것, 또는 실현불가능하면서 동

22) Frank Miller Turner(Richard Lofhouse 역, 서상복 역), 『예일대 지성사 강의(European Intellectual History from Rousseau to Nietzsche)』, 책세상, 2016, 38면.

23) Frank Miller Turner(Richard Lofhouse 역, 서상복 역), 『전계서(주22)』, 39면.

24)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15년 말 발표한 ‘2016 20대 트렌드 리포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25)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 2015.

26) Robert D. Putnam(정승현 역), 『나 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2000, 17면.

27) 김운태, 『사회적 인간의 몰락』, 이학사, 2015, 318면.

시에 위협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 즉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개별집단의 이해에 묶여 있어 공공선을 추구할 동기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불가능’하고, 오늘날의 다문화적 사회에서 시민들의 시민적 덕성이 강해지는 경우, 시민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덜 관대해지고 자신들의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열광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끝으로, 그들은 어떻게 시민적 덕성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 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⁸⁾

2. ‘공공선과 시민의 순환’ 고리가 존재하는가?

‘복지 국가’로 알려진 나라들은 누진 세금을 통한 세수를 통해 나름 탄탄한 공공 영역과 복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가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교육과 의료를 ‘공유화’한 것이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수십 년의 투쟁과 논쟁을 거쳐 의료의 공공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구축했다. 누진적 세금 정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데 여러 반대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하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스웨덴의 ‘국민의 집’ 모델은 (공화주의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이상을 실현한 모델로 평가된다.

스웨덴 ‘국민의 집’ 모델에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국가 공동체의 이상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했다는 점에 대단한 성과가 있다. 스웨덴 정치는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아 공적 영역을 탄탄하게 하고, 복지체도를 구축했다는 실례를 제공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탄탄한 공공재를 확보한 선진 국가들은 치열한 논쟁과 투쟁을 거쳐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스웨덴 ‘국민의 집’ 모델이나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한 순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지속적으로 진행된 공공성 확보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가능했다. 국내외 경제 사정에 의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축소 움직임이 제기되지만, 그럼에도 이미 탄탄하게 확립된 기초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 ‘복지병’에 걸렸다거나, 복지국가가 망

28)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게서(주3), 146면.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견실하게 사회 안전망을 받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같은 나라는 막강한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자치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다. 공공 영역이 탄탄하지 못해 공공시설과 사립시설의 격차는 엄청나다. 교육과 의료를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 가난한 국민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도 이제까지 효율적인 사적 영역에 많이 의존했다. 공적 영역은 최소한의 것만 보장할 뿐이다. 공공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다른 정책들은 부자를 직접적으로 위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공공 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상쇄된다.²⁹⁾ 사적인 의료를 공적인 사회보험체계에 강제로 연결시켜 의료 공공성을 대체했지만, 탄탄한 교육 공공성은 상실했다. 교육은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단기간에 이루었지만 그에 어울리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했다. 좌파와 우파의 간극이 너무 커서 동일한 아젠다를 설정하기조차 어렵다. 그 가운데 시민의 삶은 점점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개인화되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 ‘공공선과 시민의 순환’ 고리가 존재하는지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의료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국민의 시민의식은 어떨까? 시민의 적극적 참여, 탄탄한 공공 영역, 시민의 탄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지경이다. 공공시설을 믿지 못하고 사적인 민간 시설에만 의탁하는 사회에서 과연 공공성을 추구할 시민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지 않는가? 공화주의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백번 옳지만(필자 또한 공화주의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론과 현실은 별개의 문제이지 않나? 공화주의는 현실에 기반해서 실현 가능한 이론을 전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 의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발휘할 리 만무하다. 소외되고 배제되면 이로 인해 저항하게 되지만 그 저항도 그리 거세지 않다. 깨어있는 시민 없이 탄탄한 공공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이 점에서 다시 공화주의는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공공 체계의 구

29) 이종수, 「정부는 공정한가?」, 대영문화사, 2012, 15면.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그것이 비록 특정한 분배 의도를 지닌 정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적, 거시적으로 볼 때 부유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종수, 상계서(주29), 43면.

축'이 중요한 만큼 '시민의 힘'은 중요하다. 제도권 정치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넓은 의미의 정치, 시민 정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공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있는 시민을 기대하기 어렵고, 깨어있는 시민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 체계의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형성적 정치가 없이는 제대로 된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형성적 정치의 기반은 벌써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시민의 힘'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공적 영역이 탄탄하게 갖추어지면 이로써 형성적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시민이 양성된다. 이 시민들이 다시 공적 영역을 탄탄하게 유지해 나간다(형성적 정치 →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 형성적 정치). 시민과 공공선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 필자 또한 이 의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 사회에는 이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다. 공공선을 지향하는 시민을 양성할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탄생을 기대할 수 없다. 복지체제로도 시민의 탄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지더라도, 복지 수혜를 받는 시민의 자율성 확보는 쉽지 않다. 복지체계를 통해 수혜를 받아도, 시민적 덕성과 자치 능력은 배양할 수 없고 더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³⁰⁾ 수혜자로서의 시민이 아닌 권리자로서의 시민을 배양해야 한다. 이는 복지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공적 영역을 통해 가능하다. 문제는 탄탄한 공적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전히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와 절연되어 사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을 조명해 보면, '공적 영역'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공적 영역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은 탄생할 수 없다. 오늘날 사회 문제를 내 문제처럼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30) 로버트 케네디의 우려이다. “그(로버트 케네디)의 우려는 복지국가가 실현되더라도 자치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는 통찰, 다시 말해 복지국가가 자치에 필요한 시민적 능력과 공동체적 자원들을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괄호 안은 필자가 첨가한 것임).” Michael J. Sandel(안규남 역), 전 계서(주18), 398면, 401면.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라고 하면 지역 공동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연고와 혈연에 더 매여 있다.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운동의 여파를 시민들 모두에게 전파하기는 역부족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유주의가 팽배해 있다. (종교로 묶여진 이슬람 사회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다.) 오늘날 부의 불평등은 생활양식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계층화의 문제는 계급화의 성격을 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이 격리된 채 다른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간다.

3. ‘비지배로서의 자유’ 대신에 ‘적극적 자유’는 어떤가?

필자는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나 ‘비지배로서의 자유’ 개념에 대해 그리 큰 이의가 없다. 필자 또한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바에 매우 동감한다. 공화주의의 자유개념은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가 사회 구성원의 자유 증진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가장 잘 드러낸다.

법을 통해 사회의 공공선을 지키고, 법을 통해 공적 공간, 공적 재산이 지켜야 한다.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은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법의 이러한 역할을 자주 망각한다. 법은 개인의 사적 이익(권리)을 보호해야 하지만, 공적 사물을 효과적으로 지켜야 하는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도덕을 통한 공적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기에, 강제력을 수반한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 설정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공화주의는 자신들의 자유관(‘비지배로서의 자유’)을 통해 양자의 조화를 꾀한다. 진정한 자유는 사적 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은 ‘법을 통한 자유’라는 특징이 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가 바라보는 ‘개인의 자유’가 다르기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법의 제정과 집행을 바라보는 것 또한 매우 달라진다. 한 가지 예로 오늘날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는 여러모로 어려운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성을 확보하는 법과 제도들은 힘있는 사인(私人)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극

적 자유론을 주장하는 입장이나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법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이들에게는 웬만한 공익이나 공공선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된다. 예컨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누진세 적용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법으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³¹⁾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소득에 따른 세금은 간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지배’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론상으로 공화주의가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에 훨씬 유리한 입장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필자는 그 실천 방안엔 문제점을 제시했다. 시민적 덕성을 키우고 자치를 통한 자유를 추구하는 ‘형성적 정치’를 현대 사회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면,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의료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이 확립된 상태라면 시민의식이 성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시민적 덕성과 자치 능력, 형성적 정치의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필자는 공화주의 자유 개념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음에도, 이를 실천하는 공화주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살핀 것처럼)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과제를 한 단계 낮추어 보는 것은 어떤가? 자율적이고 형성적인 시민을 양성하지 못해도, 최소한의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는 어떤가? 필자는 ‘평등지향적 자유주의’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다. 고대인은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와 연결시켜서 생각했다. 공동체를 우선하고 공동체에 봉사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를 추구했다.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공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없기에, ‘시민적 덕성’을 기르고 시민들의 자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시민적 참여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는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에 기초하고 있어, 사회의 공동체성을 찾기 어렵다. 이제 개인은 공동체이든 사회이든 자신이 속한 단체와 별개로 자유를 추구한다. 자유로운 개인과 사회의 분화는 연관되어 있다. 루만(Niklas Luhman)은 근대적 개인성의 원천이 ‘사회 속에서 계층분화가 기능분화로 이행한 것’에 있다고 지적하였다.³²⁾ 개인화되고 원자화된 개인은 더 이상 ‘시민적 덕성’이나 ‘자치’, ‘형성적

31) Michael J. Sandel(안규남 역), 전계서(주)18, 17-18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시민적 덕성', '자치', '형성적 정치'가 중요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이를 실천하기는 요원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기반적 이유를 근거로 자유주의 가치관은 널리 퍼졌고 오늘날 지배적인 가치관이 되었다. 세속화된 사회는 도덕과 윤리를 지탱해 줄 사상을 잃어버렸고, 자유주의 시대는 방종에 이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 사상은 공동체와의 연결 고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쪽에서는 현실에서 실현가능하지 않은 이론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는 이론을 주장한다. 자유주의 가치관 내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유주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 롤스(John Rawls)와 드워킨(Ronald Dworkin) 이론과 같은 평등지향적(의무론적) 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한다. 필자가 보기에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공화주의에 못지않은 자유 개념을 가지고 있다.³³⁾ 자유를 위해서는 자원(resources)이 있어야 한다. 빈곤을 단순히 낮은 소득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로 보아야 한다.³⁴⁾ 사회에는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資源)이 있다. 그러나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힘들어하기에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생존이 확보되어야 하고, 생존을 넘어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과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체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 중에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필자는 여기서 '공화주의 자유' 개념에 대한 작은 의문 2가지를 부연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자유' 개념에 대한 작은 의문 하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 개념으로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이론 구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32) Zygmunt Bauman(문성원 역), 「자유」, 이후, 2002, 81면.

33) '적극적 자유' 개념과 '비지배로서의 자유' 개념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에 따르면 소극적 자유의 문제가 각각의 개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문제라면, 적극적 자유의 문제는 누가 지배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대립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의 근본적 대립의 기초로 지적되곤 한다." 김원식, 「배제, 무시, 물화」, 사월의 책, 2015, 31면.

34) Amartya Sen(김원기 역),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2013, 64면.

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본권 이론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자유주의 기본권 이론 자체가 나름 선명한 이론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익을 담고 있는 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그 제한이 정당한지를 비례성의 원칙을 통해 꼼꼼하게 살피기 때문이다. 공화주의 기본권 이론에 기초해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을 다시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공화주의 자유 개념에 기초해 자유와 공익의 충돌을 다루는 이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진정한 자유는 사적 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표하는 공화주의 자유 개념을 이론화하기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

또 다른 작은 의문은 공화주의 자유관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물론 이 의문은 자유주의 자유관 등 모든 자유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보다 훨씬 부담스럽지만, 공동체주의보다는 덜 부담스럽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공동선을 우선시하는 반면에, 공화주의는 ‘비지배자유’를 앞세우기 때문이다.³⁵⁾ 공동체주의자들은 공화주의자들과 달리 특정한 도덕적 선 관념을 공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³⁶⁾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동체 가치라는 명목으로 특정한 선 관념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가 공동체의 선 관념을 법과 정책을 통해 강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 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가? 공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유 개념임에도, 현실적으로 공유될 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다. 자유 개념의 의미 폭은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이는 아마도 인간존엄 개념의 다의성보다 더 큰 의미의 폭을 가진다.

III. 정치, 시스템. 시민의 콜라보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시민적 덕성을 현대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법에 의한 공적 영역의 확보와 운영을 포기할 수는

35) Philip Pettit(곽준혁 역), 전게서(주10), 옮긴이 머리말, 18-19면.

36)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전게서(주3), 138-139면.

없다. 따라서 필자에게는 공동체가 아니어도(공동체주의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민적 덕성과 자치의 방법이 아니어도(공화주의에 의하지 않더라도), 법을 통한 공적 영역의 확보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는 사회가 이질적으로 분화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기적 연대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물음과 일맥상통한다. 필자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대 사회에 적합한 이론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1. 공공 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우리 사회는 충분히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 복잡해서 일률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 이제는 각 기능체계의 분화를 논할 수밖에 없다. 복잡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전체로서의 사회를 다룰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원인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조절하는 체계는 불가능하며, 대신 기능체계가 이를 대신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공화주의는 ‘시민적 덕성’, 이에 기초한 ‘형성적 정치’에 모든 것을 거는 ‘비현실적인’ 이론이다. 이론상으로 시민의 형성적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 이후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성적 정치에 모든 원인을 돌릴 수는 없다.³⁷⁾ 필자는 ‘시민’을 대신해 ‘공공 시스템의 운영’에 눈을 돌리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체계는 ‘복지체계’와 같은 체계이다. 사회의 공공 시스템도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복지체계와 같은 체계는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 운영되지 않는다. 먼저 시민과 정치가 함께 어울려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이후 정의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 이때 사회 불평등에 대항하

37) 물론 최근 박근혜정부의 적폐에 대한 촛불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이 직접적으로 일어나 사회의 흐름을 바꾼 예는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부정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평소에 사람들은 공공선과 상관없이 살다가도 그 사회의 부정이 심각해질 때 시민성을 다시 띤다. 평소에는 시민과는 별개의 삶을 살다가 부정의한 시기에 시민으로 등장한다. 시민의 형성적 정치는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이 존재할 때 강한 힘을 갖는다.

는 사회운동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사회체계의 거대 변화는 주로 사회 운동에 그 시발점을 두고 있다.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 불평등의 거대한 흐름에 제동을 걸 수도 있고 경고장을 날릴 수 있다.³⁸⁾ 사회운동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운동은 운동으로서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운동이 종국에 지향하는 바는 ‘체계의 변화’이다.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 장치가 제대로 운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운동이 무엇인가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운동을 사회 불평등을 낳는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 불평등을 시정할 체계의 수립과 운영을 지향한다.

필자는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형성적 정치’가 초창기 복지체계의 형성과 이후 복지체계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공화주의 이론에 비판적이지만, 공화주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형성적 정치가 없이 복지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복지체계는 시민의 참여 없이 만들 수 없다. 복지체계를 형성한 이후에도 ‘형성적 정치’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많은 부분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기능은 체계에 맡겨진다. 경제체계와 같은 자율적인 체계는 계속해서 자기준거에 기초해 자기생산을 통해 분화되어 가지만,³⁹⁾ ‘초창기 복지체계’와 같은 비자율적인 체계는 그렇지 못하다. 자율적인 체계와 비자율적인 체계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드러낸다. 자율적인 체계는 체계의 자율성에 맡길 필요가 있지만, 비자율적인 체계는 여전히 국가에 의해 이끌어질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체계는 그 자율성을 따라 확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자율적인 체계

38) 때론 사회운동은 거대한 정치운동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전 공산주의 운동이 그런 흐름이었다. 이는 전혀 다른 사회를 꿈꾸는 거대한 흐름이었다. 오늘날의 사회운동은 조금 성격을 달리 한다. 몇몇 소수의 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운동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저항하고 소수자 운동으로 사회 불평등이 시정될 것을 요구한다.

39) 불평등을 낳는 것도 체계이고,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도 체계를 통해서이다. 체계에는 정의로운 체계가 있는가 하면, 정의롭지 못한 체계가 있다. 물론 사회의 부분체계 하나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예컨대 사회의 경제체계는 부의 창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할 뿐 부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의 공정한 분배를 정의롭다고 판단한다면 경제체계는 정의롭지 않은 체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를 창출하는 경제체계가 정의롭지 않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만약 경제체계가 소수 대기업에 유리하게 치중되어 있다면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하겠지만, 공정거래에 기초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존하고 있다면 이를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다. 경제체계는 복지체계나 학문체계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는 그렇지 않다. 비자율적인 체계라고 해도 자율성을 갖추지 않을 때만 국가가 주도할 뿐이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춘 뒤에는 그 자율성에 맡길 필요가 있다. 복지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시민의 형성적 정치나 국가는 복지 체계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된다.

복지체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복지체계의 ‘자기준거성’을 말할 수 있을까? 자율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과 정치의 콜라보’에 기초한 제도 개혁이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체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시민과 정치의 콜라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공공선을 실천할 수 없다.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공성을 담는 법이 그냥 만들어진 역사는 없다. 서구 복지사회가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공공성을 보장하는 법이 탄생하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전에 먼저 요구된다. 더 나가서는 시민들의 투쟁이 요구된다. 법은 시민의식의 반영이고, 그 나라 정치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복지체계의 자기준거에 의존하기 전에, 우선 제대로 된 복지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⁴⁰⁾ 하지만 복지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시민의 직접적 정치보다는 체계의 자율성에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한다.

2. 정치의 힘

정치에서 답을 구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정치는 몸에 담구면 안 되는 더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가로 막는다. 우리나라 정치는 3류라는 현실적인 제약도 무시하기 어렵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그 정치가 사회 발전의 장애물이 되는 현실을 목도한다. 그럼에도 몇몇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위대한 시민운동의 힘을 정치가 넘겨받아 정치 혁명을 이룬 곳이 적지 않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위대한 정치를 통해 그 나라의 공공 시스템이 구축된 예를 몇몇 선진국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독일의 예가 바로 그것이

40) (매우 어려운 환경임에도) 복지체계의 수립에는 ‘형성적 정치’가 절실히 보인다. 필자는 점점 공화주의자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만큼 공화주의의 주장에 공감해서이다. 하지만 필자는 공화주의자는 아니다.

다. 스웨덴의 ‘국민의 집(folkshemmet)’ 역사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44대 대통령 오바마는 그의 책 ‘담대한 희망’에서 “왜 정치판처럼 더럽고 추잡한 곳에 뛰어들려고 하는가”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 회의적 시각을 갖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정치에는 또 다른 전통이 있다. ...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서로서로에 대해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힘이 분열시키는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상당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 정책의 우선순위를 약간만 조정해도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고 국가적으로 당면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다.”⁴¹⁾

정치는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데 매우 유력한 방법이자 수단이다.⁴²⁾ 시민 혁명은 사회 부정의에 저항하고 부정의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사회 정의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다. 사회 정의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작업은 시민 혁명의 힘을 이어받은 정치의 몫이다. 정치권은 사회에 공공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정치가 공공 시스템 구축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를 판단할 수 있다. 공공 시스템 구축과 전혀 관계없이 정치가 엉뚱하게 돌아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공공 시스템을 단단하게 구축하는데 정치의 온 역량이 쓰는 국가도 있다. 공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나라에서 공공성에 관심을 두는 시민의 탄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 공공 시스템과 시민의 순환

오늘날 공공 시스템의 작동 없이 시민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정의한

41) 박상훈, 「정치의 발견 - 정치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 강의」, 후마니타스, 2011/2015, 21-22면에 재인용함.

42) 박상훈, 전개서(주41), 33면.

체제에 대항하는 시민 혁명을 통해 탄생하는 시민은 아주 강력하지만 지속적인 것이 아니다. 공공 시스템에 의해 공공성이 강조될 때에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양성된다. 공화주의와 필자 주장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필자는 공공 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운영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공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치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시민의식이 공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영되지만, 공공 시스템을 통해 시민은 다시 탄생한다. 공공 시스템과 시민은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는 관계에 있다. 물론 필자가 공공 시스템을 통해 양성된다는 시민은 공화주의가 말하는 시민과는 다른 모습이다. 공화주의가 말하는 시민적 덕성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 형성적 정치의 몫은 제도권 정치와 시민사회에 맡겨져 있다.

제대로 된 공공 시스템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사회의 극한 부정의에 대항하는 시민 불복종이나 혁명은 가능할지라도, 이를 토대로 공공 시스템이 일시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시적인 혁명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단한 노력을 거쳐 공공 시스템은 만들어진다. 공공 시스템이 만들어진 후에도, 이후 그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 이 경우 시민의 형성적 정치는 다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시민의 형성적 정치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복지체계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사회의 부정의가 드러날 때 다시 등장한다.

4. 나가며

필자는 공화주의 이론을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비지배’로서의 자유, 시민의 형성적 정치로 요약했다. 필자는 공화주의 자유관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나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에는 그리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필자의 이견은 ‘시민의 덕성에 기초한 형성적 정치’가 과연 현대 사회에 가능한가에 집중되었다. 공화주의 이론에서 ‘시민의 덕성에 기초한 형성적 정치’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시민의 형성적 정치가 가능해야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덕성을 제고하기 어렵고 시민의 형성적 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시민'에 향한 공화주의의 눈길을 '공공 시스템과 정치'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사회의 공공 시스템이 시민의 참여 없이 형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는 시민보다는 제도권 정치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정치'는 '기술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성적 정치'를 말한다. '국민의 집' 구상을 현실에서 이루어낸 스웨덴의 정치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한 독일의 정치를 교사로 삼을 수 있다.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법을 통한 공공선 확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권 정치의 힘에 의해 '공공 시스템'이 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시민의 힘도 필요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시민의 힘'은 공화주의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중이 작으며, 필자가 상정하는 '시민의 개념'도 공화주의와 다르다. 필자는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보다는, 각자의 분야와 위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을 상정한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제시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정치를 통해 공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보면 공공 시스템에 한 순간에 형성되지 않았다. 수십 년에 걸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했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성'을 무시한 채 정치가 행해지기에, 시민이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곤 한다. 우리나라는 시민의 힘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물리쳤지만, 정치의 힘을 통해 공공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는 못했다. 전직 대통령에 구속되고 수사 받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권을 바라볼 때, 제도권 민주주의에 기대는 것은 너무 유치한 발상일까? 존경받고 박수 받는 정치가 일정 기간 연속될 때, 우리 사회의 공공 시스템은 비로소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참고문헌

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 한길사, 2010/2011.

김경희, 「공화주의」, 책세상(Vita Activa 개념사 15), 2009/2014.

- 김원식, 「배제, 무시, 물화」, 사월의 책, 2015.
김윤태, 「사회적 인간의 몰락」, 이학사, 2015.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 2015.
박상훈, 「정치의 발견 - 정치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 강의」, 후마니타스, 2011/2015.
이종수, 「정부는 공정한가?」, 대영문화사, 2012.
장동진,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1.
- Zygmunt Bauman(문성원 역), 「자유」, 이후, 2002.
Will Kymlicka(장동진 外 역),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5.
Philip Pettit(곽준혁 역), 「신공화주의」, 나남, 2012.
Robert D. Putnam(정승현 역), 「나 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2000.
Michael J. Sandel(안규남 역), 「민주주의의 불만」, 동녘, 2012.
Amartya Sen(김원기 역),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2013.
Frank Miller Turner(Richard Lofhouse 엮음, 서상복 역), 「예일대 지성사 강의 (European Intellectual History from Rousseau to Nietzsche)」, 책세상, 2016.
Maurizio Viroli(김경희, 김동규 역), 「공화주의」, 인간사랑, 2006.

[Abstract]

Light and Shade of the Republican Theory

Ko, Bong-Ji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In this paper, I summarize the claims of republicanism in three ways: securing publicity through law,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civic

formative politics. In the view of the Republicans, the concept of 'liberal liberty' did not lead to 'rule of law' and 'formative politics of citizens', and was helpless to secure the publicity necessary for freedom. Republicans saw the concept of 'republican liberty' as leading to 'rule of law' and 'formative politics'. The Republican argument is appealing to the freedom of non-domination, the securing of publicity through law, and the connection of formal politics as a bundle.

I have looked at the theory of republicanism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First, we examined whether republican theory is suitable for modern society. Contrary to previous societies that aimed at community, modern society became a complex and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Republicans should look at whether the era in which republicanism was claimed and the age of today are changing too much. The republican theory itself is a wonderful thing, but we have to see if it can be realized in reality. Above all, the possibility of citizens' autonomy and formative politics is questioned in terms of feasibility.

I think that the republican eyes toward 'citizens' should be turned into 'public system and politics'. Of course, I do not think that the public system of society is formed without citizen participation. But I think that the power of institutional politics is bigger than the citizen to create the public system. Here, I think that 'politics' is not 'politics as technology' but 'formative politics to build a system'. It is possible to use the politics of Sweden which made the concept of 'the house of the people' realistic and the politics of Germany which built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teacher. In order to achieve the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securing the public line through law', Republicans must establish a 'public system' in society by the power of institutional politics. Of course, the power of the citizen is also needed here. The 'power of citizens' I think is smaller than that of republicans, and the concept of 'citizen' I suppose is also different

from that of republicanism. I suggest citizens who realize their values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positions, rather than civilian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society by reducing civic virtues.

Key words : republicanism, citizen, publicity, non-domination, politics, system